

금속노조
21대 대통령선거
특별호

금속노동자

ilabor.org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발행인 장창열 전화 02-2670-9507 주소 서울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6층



- 02 금속노조 대선 요구
- 03 공급망·일자리 보호
- 04 금속노조 지지 후보

내란세력 완전 청산!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개정!

자본 중심 한국사회를 노동중심 민주사회로

내란세력을 몰아내고 되찾은 민주주의!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평등'과 '연대'를 중심 가치로 삼는 '노동중심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자본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노동중심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노동조건·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전면적인 노동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입니다.

국제 기준에도 못미치는 국내 노동법을 이제는 바꾸야 합니다. 더 이상 법으로 노동자의 단결·교섭·파업의 자유를 가로막고 처벌하는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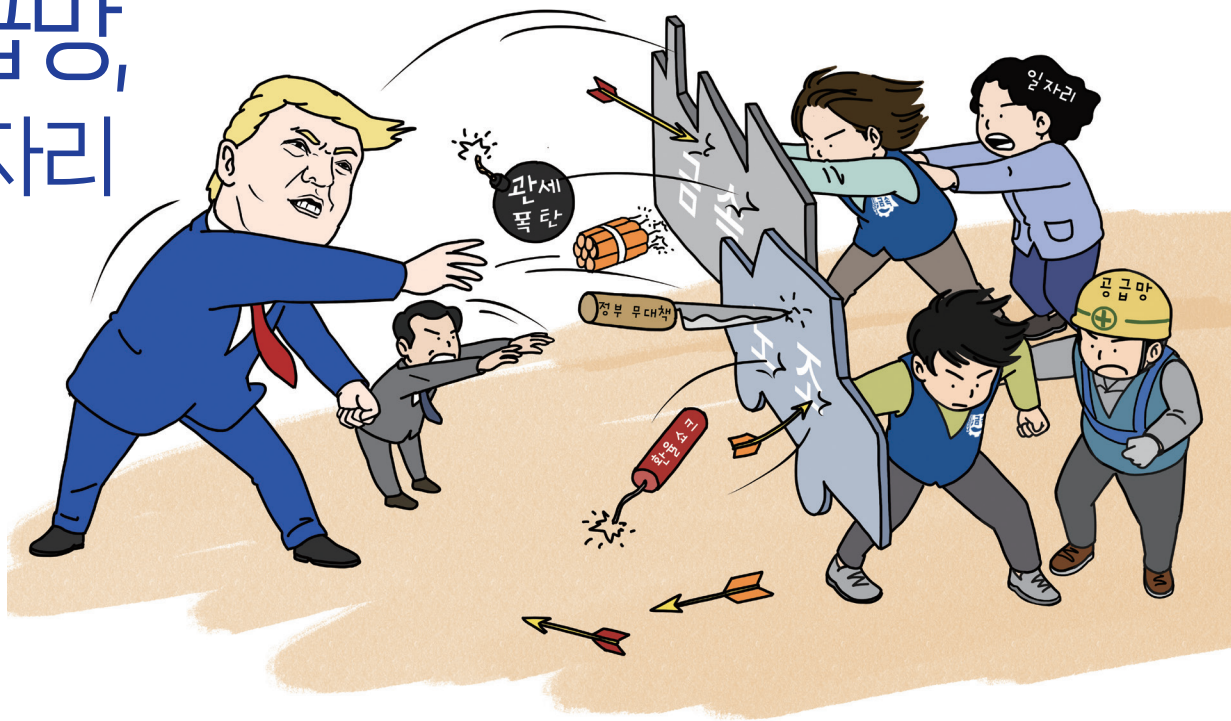
금속 노조 대선 요구	윤석열 노동개악 폐기	- 노조 회계공시 제도 즉각 철폐 - 타임오프 노사자율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	- 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 - 산별교섭 제도화 -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보장 - 산업단지,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여성에 대한 고용 및 임금차별 철폐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급망 위기, 인구구조 위기 대응책 마련	- 산업전환기 국내 공급망·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정교섭 등 협의 구조 마련 - 국내 공급망·일자리 보호 정부 정책 및 제도 마련 - 정년연장 등 인구구조 위기 대응 노동시장 정책 수립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작업중지권 온전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및 엄정 집행
	노동중심 민주주의와 다당제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	- 보수양당제 강요하는 소선거구제 폐지 - 각종 선거의 비례성 확대(비례선출 의원 확대, 진입장벽 완화)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정당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당법 개정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제한하는 각종 법제도 폐지 -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미국발 관세 전쟁

위협받는 공급망, 국내 제조업 일자리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윤석열 쿠데타로 대외 신인도까지 추락하며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를 더욱 열어

돌리고 있습니다.

전쟁, 기후위기, 세계 시장 저성장, 코로나 사태 후유증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미국만 살겠다는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가 미국에 등을

그런데 정작 한국의 고위 관료들과 재벌은 돈을 싸들고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도 현대자동차는 같은 기간 44

조 원의 매출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44조 매출 중 31조를 들고 미국 트럼프 앞에서 미국 현지 생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종속되어서는 결코 경

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는 대선 후보들과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내 제조업 노동자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경제 주체가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할 산업·경제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새 정부에 관세전쟁·산업공동화 대책을 요구합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은 미국이 살기 위해 전 세계 민중 모두를 죽이겠다는 도발입니다.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해 재벌·대기업만 살면 되고, 하청·부품사와 중형 기업들은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은 트럼프의 발상과 똑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수출 위주의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는 위험합니다.

금속노조는 대선 후보들과 6월에 출범할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한국 경제, 특히 제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공급망 보호를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합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일자리를 지키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어려울수록 빛나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과 하나된 투쟁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 위기의 시대를 돌파합시다!

산업 공동화·공급망 위기 해결 대안

- **국내 투자 확대 요구**
생산 이전 금지와 해외 투자 시 국내 투자 동반 유도
- **외투기업 규제 대책 마련**
외투기업의 철수 방지와 국내법 위반 엄중하게 처벌
- **생산 유지 노력**
하청·납품사와 중소형 기업의 존속을 위한 산업 지원책 실시
- **국내 공급망 보호**
생산 시 국내 부품 의무 사용, 또는 일정 비율 이상 사용시 추가 지원
- **내수 확대 지원 정책으로 수출 의존 경제 체질 극복**

금속노조 지지 대선 후보



차별없는 나라, 사회대전환!
평등하게 · 안전하게 · 당당하게 · 노동자에게

민주노동당

권영국 5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연대후보

현) 민주노동당 대표

전) 민주노총 법률원 초대 원장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전)故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감사

전) 구의역 사망재해 진상조사단 단장

국민은행 231401-04-366303

대통령(예비)후보자권영국후원회

입금내역 표시 방법 본인이름금속노조



금속노조 대선 방침 요약 13기 42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2025.04.29.)

-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따라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진보당)의 후보를 노조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로 지지합니다.
- 금속노조의 강령 정신과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 · 지부 · 지회는 보수정당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 내란세력 완전 청산을 위해 금속노조 조합원은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의 후보와 이에 결탁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 조합(업종분과 포함), 지부, 지회는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 사회대개혁 요구에 동의하는 진보정당 후보를 우선 대상으로 정책협약을 추진합니다. 진보정당 후보를 제외하고 보수정당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정책협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 정책 질의는 정당 소속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제21대 대선 투표 안내 [본투표] 6.3(화) 6시~20시 [사전투표] 5.29(목)~30(금) 6시~18시